

# 文 대통령, 민생경제 최우선... 경제성과 창출 고삐 쥘다

대한상공회의소서 올 첫 행보  
“새해 경제·혁신에 더 힘 쏟을 것”  
평택항서 친환경차 첫 수출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혁'과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민생경제'가 최우선임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가.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 창출 행보를 연초부터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이 그렇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

은 경제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대한상의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자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새

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이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관련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베풀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

기다. 총선을 통해 드러날 성적표가 안 좋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때 문 대통령 발언이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오는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여권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15 총선 불출마 선언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경제단체장과 전국 상의 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해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경 수사권, 인사청문회 격돌 초읽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민주당, 4+1협의체 단일안 의결 구상  
자유한국당의 '실력 저지' 카드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때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점이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4+1협의체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하나의 정쟁 무대는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7~8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석대성 기자

## 전략공천·힘지출마... 정치권 난세 국면

〈민주당〉

〈한국당〉

민주당, 박영선·진영·김현미 장관 등 의원 20여명 4·15총선 불출마 선언  
한국당, 황교안 대표 수도권 출마키로

부·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유은혜(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 4명은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의 지역구 서울 구로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들어갈 것이라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구로구에는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진 장관의 지역구 서울 용산에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해 1월 사임 후부터 지역구 기반을 닦으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내 예비후보로는 선종문 변호사와 도전수 희망시 민연대 이사장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 지역구 경기 고양정은 전략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 장관의 지역구 고양병에는 이상성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당 소속 예비후보로 나온 상태다. 이외에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인사는 60여명, 예비후보자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선 황 대표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불모지 출마를 중용하면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3일 광화문 장외집회

에서 “중진 의원들께서도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며 “저부터 앞장서 올 해 총선에서 수도권 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텃밭은 통상 영남권이란 인식이 크다. 공천권을 쥐 황 대표의 이같은 압박은 영남권 중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PK(부산·경상남도)에선 김무성(부산 중·영도)·김세연(부산 금정)·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도읍(부산 북·강서울)·김성찬(경남 창원·진해)·윤상직(부산 기장) 의원 등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대구·경상북도) 의원 중엔 아직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힘지 출마를 예고한 현역이 없다. PK의 경우 여야 승부처로 꼽히지만, TK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권 텃밭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천만 받는다면 의회 입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개혁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주를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물론 한국당도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당장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전 대표의 행선지가 독자노선인지, 한 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난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대거 불출마 선언으로 공백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선과 잡음이 나올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중진 의원 힘지 출마 요구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중 오는 4월 15일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전략공천(공직후보자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을 차기 국무총리로 인선했고, 이낙연 총리는 정 의원 지역구 출마가 유력해졌다.

다만 이외에 민주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빈 자리에선 치열한 경선과 적잖은 반발 등이 나올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가령 지난 3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

## “검찰개혁 완수위해 경륜·역량 쏟을 것”

민주당, 고검장 출신 소병철 영입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참여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 전략 계획’ 정책기획

더불어민주당이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사천)를 영입했다. 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로 소 전 고검장 영입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올랐다. /석대성 기자